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3078
------------	------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이용선 · 박홍배 · 전용기
이훈기 · 서영석 · 오세희
박수현 · 김 윤 · 윤건영
허성무 · 강준현 · 박희승
임미애 · 정준호 · 이기현
황 희 · 이수진 · 황정아
박해철 · 한정애 · 김용만
김문수 의원(22인)

주 문

일제의 패망 직후 1945년 8월 24일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수많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이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 한다.)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진상규명은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일제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강제동원되었고, 당시 일본 해군의 명령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승

선한 것인 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25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불편한 역사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고통과 피해를 본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일본 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을 위해 ‘한일 양국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해 보고하고, 그 결과를 수시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은 해방 이후 본국으로 돌아오던 한국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이 사망한 비극적 사건임.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7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혹들이 남아 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일본 정부는 미국이 설치해 놓은 어뢰로 인해 배가 폭발하였고, 약 3,735명의 승선자 중 524명이 숨졌으며, 승선자 명부는 배의 침몰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해 왔음.

그런데, 2014년 승선자가 8천 명이 넘었다는 일본 외무성 문서가 발견되었고, 2016년 우키시마호가 폭탄을 신고 출항했다는 방위청 문서가 확인되면서 여전히 많은 의혹들이 남아 있음.

또한, 2024년 3월과 5월에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승선인 명부 15종이 공개되었고, 일본 정부가 승선자 명부를 포함한 우키시마호 사건 관련자료 약 75종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이 강제동원피해자였고, 당시 일본 해군의 명령에 의한 강제 승선이었던만큼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음.

그동안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은 사고의 원인도 모른 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럽게 살아왔음. 이제라도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유해 발굴 및 송환, 피해 회복,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개선되는 계기로 삼고자 함.